

## 1. 전자증권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 ☐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 전자등록의 효력( 법 제35조, 「상법」 제356조의2 ) >

#### ① 권리 추정력

-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

#### ② 효력발생요건

- 전자등록된 증권을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 ③ 신탁 대항력 요건

- 전자등록된 증권을 신탁하는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신탁재산의 표시를 전자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항

#### ④ 선의 취득

- 전자등록계좌부를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전자등록한 경우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 (예시; 초과분에 대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실물증권을 폐지할 예정임
- ☐ 시행 후 상장증권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되고 전자등록된 증권은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실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됨(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제36조)

## 2. 현행 예탁제도와 전자증권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예탁제도는 실물 증권을 예탁기관에 예탁(보관)하여 거래장부상으로만 이전을 기록하는 것으로, 점유이전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실물증권의 不動化)
- 투자자의 권리는 혼장입치(예탁)된 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구성
- 다만, 예탁제도는 실물발행을 전제로 하여 실물이 병존하는 한계를 안고 있음
- ➡ 주주 등 투자자의 실물 인출 요구 시 실물이 발생
-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면 전자화하여 실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임(실물증권의 無券化)
- 권리자는 전자등록된 증권에 직접 소유권 또는 담보권을 갖게 됨

### < 현행 증권 無券化 제도 및 관련법 체계 >

구 분	주권 불소지제도	채권 등록제도	대권발행제도
개 념	주주가 회사에 대해 불소지 의사를 신고하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채권자 등이 채권등록기관에 채권을 등록하면, 발행인은 채권을 발행하지 않음	발행금액에 관계없이 예탁 결제원 명의의 대권(大卷) 1매로 발행(무권화 유사 효과)
근거 규정	상법 제358조의2	국채법, 공사채등록법	금감원 가이드라인
대상 증권	기명주식	국채, 공사채, CD	파생결합증권(ELS 등)
이용 비율	· 주권 : 약 80% · 집합투자ABS : 100%	· 채권 : 99.8% · CD : 약 50%(추정)	· 파생결합증권 : 100%

### 3. 시행 당시 전자증권 전환 절차는?

□ 시행 당시 상장예탁증권 등 예탁되어 있는 증권은 발행회사의  
예탁내역 및 투자자의 계좌 기재내역이 그대로 전환됨

➡ 예탁증권의 경우, 발행회사·투자자의 조치 필요 없음(법 부칙  
제3조 제1항, 시행령안 부칙 제4조)

□ 시행 당시의 실물의 경우, 권리자가 발행회사에 실물을 제출하고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면, 그 계좌로 전자증권이 등록됨

➡ 실물증권의 경우, 실물의 제출이 필요(법 부칙 제3조 제3항)

#### < 시행 당시 전환절차 개관 >

구 분			전환절차	전환계좌
일괄 전환 대상	①기명 (상장 주식)	예탁수량	■ 전자등록기관이 일괄 전환 실행	일반계좌
		미예탁수량	■ 전환절차 고지→실물 보유자 전환절차 이행*→전환 실행	일반· 특별계좌
	②무기명 (상장 사채)	예탁수량	■ 전자등록기관이 일괄 전환 실행	일반계좌
		미예탁수량	■ 제도 시행 후 실물 보유자의 개별 신청	일반계좌
신청 전환 대상	③기명 (비상장 주식)	예탁수량	■ 발행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전환 실행	일반계좌
		미예탁수량	■ 전환절차 고지→실물 보유자 전환절차 이행*→전환 실행	일반· 특별계좌
	④무기명 (비상장 사채)	不可	不可	不可

※ 실물 보유자가 전환절차(실물증권 제출 및 전자등록계좌 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 명의로 특별계좌 개설하여 전자등록

※ ④사채 중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사채는 시행 당시 전환기간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시행 후에 전환 기회 부여

#### 4. 시행 당시 실물 보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 ☐ 예탁된 증권에 대한 권리자는 현행과 차이 없이 예탁제도의 고객계좌가 전자등록계좌로 전환될 예정
  - ➡ 예탁증권의 경우, 발행회사·투자자의 조치 필요 없음(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시행령안 부칙 제4조)
- ☐ 실물증권 소유자의 경우, 실물증권 제출 및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
  - 발행회사가 시행 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물 소유자(미예탁분에 대한 권리자)에게 통지할 예정(법 부칙 제3조 제3항)
- ☐ 시행 당시 실물을 제출하지 않은 권리자가 있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보호
  - 해당 실물권리자가 실물을 제출하거나 제권판결 등으로 권리가 증명될 때까지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도록 할 예정

## 5. 상장회사 등 의무전환대상 증권 발행회사의 정관변경에 대한 대책은?

- 전자증권법이 직접 시행 당시 상장주식·사채 등이 일괄 전환 되도록 하고 있어 발행회사의 정관 변경이 없더라도 전자등록 전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법 부칙 제3조 제1항)
- 아울러, 시행령안은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확인규정을 마련함
- 시행령안은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 대상 증권의 발행인이 전자 시행 후에 주식 등을 발행할 때에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시행 당시 정관과 향후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면 전자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행령안 부칙 제6조)

### 시행령안

부칙 제6조(신규 발행 주식등의 전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발행인이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 신청서에 그 신청서 제출 당시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정관이나 계약·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정관등”이라 한다)과 해당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관련된 정관등의 개정안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전자증권제도 의무적용 대상 증권